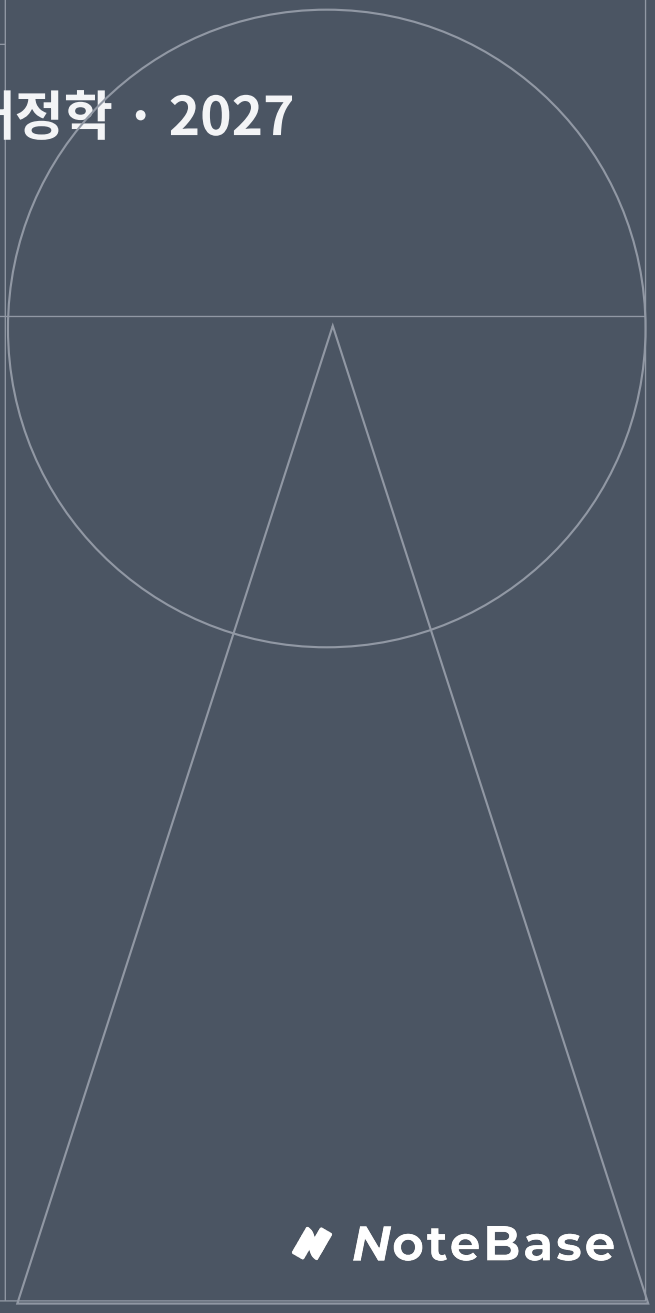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경위) · 재정학 · 2027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경위) · 재정학 · 2027

공무원/경찰/공채(경위) · 재정학 · 2027

문 1. 머스그레이브(R. Musgrave)가 제시한 정부의 3대 경제적 기능으로 옳은 것은?

① 국방기능, 조세징수기능, 소득분배기능

② 자원배분기능, 소득분배기능, 경제안정화기능

③ 물가안정기능, 국방기능, 국제수지조정기능

④ 조세징수기능, 자원배분기능, 예산편성기능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정부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분배의 공평성을 높이며 거시경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머스그레이브는 이를 **자원배분·소득분배·경제안정화 기능**으로 구분했으며, 조세징수와 예산편성은 이 기능들을 수행하는 수단·절차이다.

개념 구분

머스그레이브는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자원배분, 소득분배, 경제안정화라는 세 기능으로 구분하였다. 개별 정부 업무나 재정 운영 절차가 아니라 **경제 전체에서 달성하려는 역할**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자원배분기능은 공공재 공급이나 외부효과의 조정처럼 시장만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어려운 경우 이를 보완하는 기능이다. 국방은 공공재 공급의 대표적인 사례이므로 별도의 3대 기능이 아니라 이 기능에 포함된다.

소득분배기능은 조세와 이전지출 등을 통해 소득·부의 분배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정하는 기능이다. 효율성의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자원배분기능과 달리 **분배의 공평성**이 핵심이다.

경제안정화기능은 총수요 등을 조절하여 고용과 물가의 안정, 지속적인 성장 등 거시경제적 목표를 추구하는 기능이다. 물가안정이나 대외균형은 이와 관련된 개별 목표이지 자원배분·소득분배와 나란히 놓이는 별개의 3대 기능이 아니다.

조세징수와 예산편성은 위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 수단과 운영 절차**이다. 따라서 세 기능을 모두 제시한 자원배분기능·소득분배기능·경제안정화기능의 묶음인 ②가 해당한다.

NoteBase

문 2. 후생경제학 제1정리가 성립하는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의 불완전성

② 외부성의 부재

③ 개인 선호체계의 강단조성

④ 완전경쟁시장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후생경제학 제1정리는 완전경쟁균형의 파레토 효율성을 설명한다. **정보의 불완전성**은 이를 보장하는 조건이 아니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다.

핵심 풀이

후생경제학 제1정리는 일정한 조건 아래 **완전경쟁균형의 자원배분이 파레토 효율적**임을 말한다.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것은 누구의 후생도 낮추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후생을 높이는 자원 재배분이 더는 불가능하다는 뜻이며, 소득분배가 공평하다는 뜻은 아니다.

정보의 불완전성은 이 효율성을 보장하는 조건이 아니다. 거래 당사자가 재화의 품질이나 상대방의 행동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등으로 효율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문항의 통상적인 완전경쟁 모형에서는 **완전정보**를 전제로 한다.

외부성이 없으면 제3자에게 미치는 비용·편익 때문에 사적 선택과 사회적 선택이 어긋나는 문제가 제거된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개별 경제주체가 가격수용자로 행동하므로 시장지배력에 따른 자원배분 왜곡도 배제된다.

선호의 강단조성은 다른 재화의 양이 줄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재화가 늘면 더 선호한다는 조건이다. 이는 제1정리에서 사용하는 **국소적 비포화성보다 강한 충분조건**이므로 성립을 뒷받침하는 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 강단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최소 조건이라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성립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보의 불완전성이므로 ①과 연결된다.

NoteBase

문 3. 보상의 원칙(compensation principle)은 사회상태의 변화를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상태의 변화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사람의 이득이 손실을 보는 사람의 손실을 초과할 때 칼도(N. Kaldor)의 보상기준이 충족된다.

② 보상의 원칙은 실제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③ 스키토브스키(T. Scitovsky)의 보상기준은 칼도의 보상기준의 모순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④ 칼도의 보상기준에 따르면 공평성의 향상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칼도의 보상기준은 이득을 얻는 사람이 손실을 보상하고도 나아질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실제 보상이나 공평성 향상을 요구하지 않는** 효율성 기준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칼도 기준은 변화로 이득을 얻는 사람이 손실을 입는 사람에게 손실을 보상하고도 더 나아질 수 있는지를 묻는다. 여기서 이득과 손실은 사람 사이의 효용 자체를 단순 합산한 값이 아니라 **보상에 필요한 금전적 평가**를 기준으로 이해한다. 이득이 손실을 초과하면 잠재적으로 보상하고도 순이득이 남는다.

② O: 보상기준은 **실제로 보상했는지가 아니라 보상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따라서 기준을 충족해도 실제 손실을 입는 사람이 남을 수 있다. 누구의 후생도 낮추지 않는 실제 파레토 개선과 잠재적 파레토 개선을 구별해야 한다.

③ O: 칼도 기준만 적용하면 A에서 B로의 변화와 B에서 A로의 복귀를 모두 개선으로 판정하는 역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스키토브스키 기준은 **정방향은 칼도 기준을 통과하고 역방향은 통과하지 않을 것**을 함께 요구하여 이러한 모순을 보완한다.

④ X: 칼도 기준의 핵심은 **잠재적 보상 가능성에 따른 효율성**이며 공평성 향상이 아니다. 손실을 실제로 보상하거나 분배를 개선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으므로, 소득분배가 더 불공평해지는 변화도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따라서 공평성의 향상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④가 옳지 않다.

NoteBase

문 4.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제완화

② 민영화

③ 공공서비스 공급에서 경쟁도입

④ 기업의 국유화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정부실패를 줄이는 대표적 방안은 불필요한 개입을 줄이고 경쟁·성과 유인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업의 국유화는 정부의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확대**하므로, 이와 같은 정부실패 개선 방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풀이

정부실패는 정부의 시장 개입도 정보 부족, 유인 왜곡, 관료조직의 비효율 등으로 자원배분을 개선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이다. 이를 완화하는 대표적 방향은 불필요한 개입을 줄이고 **경쟁과 성과 유인**을 도입하는 것이다.

규제완화는 불필요한 진입·영업 규제를 줄여 경쟁과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민영화는 공기업의 소유·경영을 민간으로 이전하여 비용 절감과 경영 효율성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려는 방안이다. 다만 두 방안이 언제나 효율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독점이나 외부효과 등에 대한 적절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공공서비스 공급에 경쟁을 도입하면 여러 공급자를 비교하거나 경쟁입찰을 활용하여 비용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유인을 만들 수 있다. 이는 공공서비스를 반드시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공급 방식에 경쟁 압력을 부여**한다는 뜻이다.

기업의 국유화는 민간 기업의 소유를 국가로 이전하여 정부의 직접적인 경제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될 수는 있지만, 정부 자체의 비효율을 줄이는 위의 대표적 개선 방향과는 다르다. 따라서 정부실패의 일반적인 해결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이다.

NoteBase

문 5. 재정착각(fiscal illus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복잡한 조세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② 세율을 올리지 않았는데도 조세수입이 저절로 증가할 때 발생할 수 있다.

③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으로 발생한다.

④ 국채가 미래의 조세부담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투입 비용과 산출·성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제도이다. 재정 활동의 비용을 숨기는 원인이라기보다 재정착각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재정착각은 국민이 정부 활동의 비용이나 편익을 실제와 다르게 인식하는 현상이다. 세목·과세 방식·공제 등이 복잡하면 자신이 부담하는 세금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공공서비스의 비용을 과소평가**하는 착각이 생길 수 있다.

② O: 세율이 그대로여도 소득·과세표준이 늘면 세수가 증가할 수 있다. 특히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높아져 누진세의 더 높은 구간에 들어가면 부담이 늘 수 있다. 이를 세율 인상이 없다는 이유로 **추가 부담 없는 재원**으로 오인하면 재정착각이 생긴다. 세수의 자동 증가 자체와 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구별한다.

③ X: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사업에 투입한 비용과 산출·성과를 연결하여 재정 활동을 평가하려는 제도이다. 비용 대비 무엇을 얻는지 정보를 제공하므로 **재정착각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도입 자체가 재정착각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한 ③이 옳지 않다.

④ O: 국채로 지출을 조달하면 당장의 증세 없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원리금 상환을 위한 재원은 이후에도 필요하다. 미래의 조세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무시하면 **현재 지출에 드는 부담을 실제보다 작게 인식**하여 채무착각이 발생할 수 있다. 국채 발행이 비용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6.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증주의 예산제도는 부처별 예산을 일정 비율로 변화시켜 예산의 안정성을 추구한다.

②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지출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한다.

③ 영기준예산제도는 점증주의적 경향을 탈피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추구한다.

④ 영기준예산제도는 기존 편성된 예산을 완전히 무시하고 매년 새로이 예산을 편성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정책목표와 사업·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인건비·여비 등 지출항목별로 구분하는 것은 품목별 예산제도의 특징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점증주의 예산편성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삼고 여건의 변화에 따라 일정한 비율이나 금액을 증감하는 방식이다. 기존 사업과 배분 구조가 대체로 유지되어 **예산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쉽다. 모든 부처에 반드시 동일한 비율을 적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② X: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인건비·여비 같은 개별 지출항목이 아니라 **정책목표와 사업·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예산을 묶어 편성한다. 지출항목별로 예산을 구분하여 투입과 지출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방식은 품목별 예산제도이다.

③ O: 영기준예산제도는 기존 사업도 자동으로 계속 지원하지 않고 신규 사업과 함께 필요성·효과·우선순위를 다시 심사한다. 전년도 예산에 단순히 증감액만 더하는 점증주의에서 벗어나 **사업 간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방식이다.

④ O: 영기준예산제도는 전년도 예산을 기정사실이나 보장된 기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영을 출발점으로 각 사업의 예산 필요성을 다시 정당화하도록 한다. 여기서 기존 예산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것은 **기존 배분액을 당연한 기득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과거의 사업 실적이나 비용 정보까지 폐기하거나 기존 사업을 모두 없앤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중심 편성과 지출항목 중심 편성을 바꾸어 설명한 ②가 옳지 않다.

NoteBase

문 7. 비용편익분석에서 현재가치법의 의사결정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순편익의 현재가치가 0보다 작아야 사업의 채택가능성이 있다.

② 순편익의 현재가치의 크기는 의사결정의 기준이 아니다.

③ 사업안이 하나일 경우 순편익의 현재가치가 0보다 클 때 사업 대상이 된다.

④ 사업안의 내부수익률이 의사결정의 기준이 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순편익의 현재가치가 양수라는 것은 **편익의 현재가치가 비용의 현재가치를 초과**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단일 사업은 현재가치법상 채택 대상이 된다.

선지별 해설

현재가치법은 서로 다른 시점의 편익과 비용을 같은 기준 시점으로 할인한 뒤 그 차이인 순현재가치를 비교한다. 할인율을 r, t기의 편익과 비용을 각각 B와 C로 나타내면 $NPV = \sum_{t=0}^{T} \frac{B_t - C_t}{(1+r)^t}$이다. 공공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는 적절한 사회적 할인율을 사용한다.

① X: 순현재가치가 음수이면 **비용의 현재가치가 편익의 현재가치보다 크다**. 따라서 현재가치법상 경제성이 있는 채택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채택을 뒷받침하는 기준은 음수가 아니라 양수이다.

② X: 순편익의 현재가치는 현재가치법의 **직접적인 의사결정 기준**이다. 단일 사업의 채택 여부는 그 부호로 판단하고, 동일한 비교 조건의 상호배타적 대안에서는 순현재가치의 크기를 비교한다. 예산 제약 등이 있으면 허용되는 사업 조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③ O: 사업안이 하나이고 순현재가치가 양수이면 할인한 총편익이 할인한 총비용을 초과한다. 따라서 **사업 시행에 따른 순이득이 발생**하므로 현재가치법상 채택 대상이 된다. 인정 정답은 ③이다.

④ X: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를 기준 할인율과 비교하는 방법은 내부수익률법이다. 현재가치법은 할인율을 먼저 정하고 그 할인율로 계산한 순현재가치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NoteBase

문 8. 공공사업의 타당성 분석에서 사용하는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적 관점에서 본 시간선호율이다.

② 시장이자율과 항상 동일하다.

③ 사회적 할인율이 높을수록 장기 사업의 시행 가능성이 높아진다.

④ 공공사업에서는 사회적 할인율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사회적 할인율은 미래의 사회적 비용·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사회적 관점의 시간선호**를 반영한다. 시장이자율과 반드시 같지는 않으며, 할인율이 높아지면 먼 미래 편익의 현재가치는 작아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사회적 할인율은 서로 다른 시점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기준이다. 사회적 시간선호의 관점에서는 **현재의 소비와 미래의 소비를 사회가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반영하는 비율로 이해한다. 이는 미래의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② X: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이자율과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시장이자율에는 조세, 위험, 자본시장의 불완전성 등이 반영될 수 있으며, 공공사업 평가에는 사회 전체의 시간선호나 자금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고려한다. 따라서 **시장금리와의 일치가 일반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③ X: 다른 조건이 같다면 할인율이 높을수록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의 현재가치는 작아진다. 미래 t기의 편익 B의 현재가치는 $\frac{B}{(1+r)^t}$이며, r이 커지면 분모가 커진다. 통상 초기 비용을 지출하고 장기간에 걸쳐 편익을 얻는 사업은 **순현재가치가 낮아져 채택되기 어려워진다**. 모든 가능한 비용·편익 구조에서 같은 결과라고 일반화하는 것은 아니다.

④ X: 공공사업도 비용과 편익이 서로 다른 시점에 발생하므로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해야 한다. 사회적 할인율은 이러한 시점 차이를 반영하는 비용·편익 분석의 핵심 기준이며, 이를 무시하면 장래의 비용·편익과 현재의 비용·편익을 같은 가치로 취급하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사회적 관점의 시간선호를 설명한 ①이 옳다.

NoteBase

문 9. 분배의 정의(distributive justi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평등주의 견해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므로 물질적 가치도 고루 분배되어야 한다.

② 자유주의 견해에 의하면 정당하게 가질 권리가 있는 것만을 소유해야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진다.

③ 공리주의 견해에 의하면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배 상태를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④ 노직(R. Nozick)에 의하면 적극적 소득재분배하에서 분배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노직은 **정당한 취득과 자발적 이전에 따른 소유권**을 분배정의의 기준으로 삼는다. 분배 결과를 바꾸려는 강제적 재분배에 반대하므로 적극적 소득재분배를 지지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선지별 해설

① O: 문항에서 대비하는 평등주의는 사람들이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는 데서 출발하여 **소득·부 등 물질적 가치의 평등한 분배**를 중시한다. 소유가 생겨난 절차나 총효용만이 아니라 분배 결과의 평등성 자체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② O: 이 문항의 자유주의적 권리론은 각자가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재산을 소유하는지**를 중시한다. 취득과 이전의 과정이 정당하면 결과에 격차가 있어도 정의로운 분배일 수 있다. 여기의 자유주의는 평등을 중시하는 모든 자유주의 이론을 포괄하기보다 소유권 중심의 자유지상주의적 견해를 가리킨다.

③ O: 공리주의는 구성원들의 효용을 합한 **사회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분배를 바람직하게 본다. 평등한 분배가 총효용을 높이는 조건에서는 평등을 지지할 수 있지만, 평등 자체가 독립적인 최종 기준인 것은 아니다.

④ X: 노직은 정당한 취득과 자발적 이전에 따른 소유를 존중하며, 일정한 분배 결과를 만들기 위한 **강제적 소득재분배에 반대**한다. 따라서 적극적 재분배를 분배정의의 실현 수단으로 보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다만 과거의 부당한 취득이나 이전을 바로잡는 교정은 그의 권리론에 포함되므로 모든 교정적 이전까지 부정한다고 이해하면 안 된다.

NoteBase

문 10. 소득불평등도 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니계수는 전체 인구의 평균적인 소득격차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구할 수 있다.

② 5분위배율은 하위 소득 20% 사람들의 소득점유율 대비 상위 소득 20% 사람들의 소득점유비율이다.

③ 앳킨슨 지수는 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선호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불평등도를 추정하는 지수다.

④ 두 사회의 로렌츠곡선이 교차하는 경우, 로렌츠곡선으로 소득불평등도를 비교하기 어렵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앳킨슨 지수에는 **불평등 회피 정도를 나타내는 매개변수**가 포함된다. 따라서 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선호를 배제한 객관적 지수라는 설명이 틀리다.

선지별 해설

① O: 지니계수는 모든 개인 쌍의 소득 차이 절댓값을 평균하고 이를 평균소득의 두 배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 즉 **사람들 사이의 상대적인 평균 소득격차**를 나타낸다. 단순히 각 개인 소득과 평균소득 사이의 편차를 부호 그대로 더하는 방식은 아니다.

② O: 5분위배율은 **상위 20%의 소득점유율을 하위 20%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양 집단의 인구 비중이 같으므로 상위 20%의 평균소득을 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누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 통상 이 비율이 클수록 두 집단의 격차가 크다.

③ X: 앳킨슨 지수는 사회가 **불평등을 얼마나 회피하는지**를 나타내는 매개변수를 포함한다. 같은 소득분포라도 불평등 회피 정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불평등에 대한 선호나 가치판단을 배제한 지수라는 설명이 틀리다.

④ O: 로렌츠곡선은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누적한 인구 비율에 대응하는 누적 소득점유율을 나타낸다. 두 곡선이 교차하면 구간에 따라 어느 곡선이 위에 있는지가 달라져 **한 분포가 다른 분포를 로렌츠 지배하지 못한다**. 따라서 로렌츠 기준만으로 불평등 순위를 확정할 수 없으며 추가 지표나 가치판단이 필요하다.

NoteBase

문 11. 공적연금제도에서 부과방식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① 개인이 적립한 기금으로 자신의 노후급여를 수령한다.

② 보험료 부담은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③ 세대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④ 현재 근로세대가 납부한 보험료로 현재 은퇴세대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부과방식은 **현재 근로세대의 보험료로 현재 은퇴세대의 급여**를 지급한다. 자신의 노후급여를 위해 재원을 미리 쌓아 두는 적립방식과 달리 세대 간 이전을 기본으로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개인이나 가입세대가 근로기간에 납부한 재원을 적립·운용하여 자신의 은퇴 후 급여에 충당하는 것은 적립방식의 기본 원리이다. 부과방식은 현재 수급자의 급여 재원을 **현재 근로세대의 부담**으로 조달한다.

② X: 부과방식의 보험료 부담은 가입자와 수급자의 상대적인 규모에 영향을 받는다. 급여 수준 등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저출산·고령화로 근로세대에 비해 은퇴세대가 많아지면 **근로자 1인당 부양 부담이 커진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급여 수준 등을 조정해야 할 수 있다.

③ X: 현재 근로세대가 현재 은퇴세대의 급여를 부담하므로 세대 사이에 자원이 이전된다. 특히 세대별 인구 규모나 임금상승률, 제도 도입 시점에 따라 납부와 수급의 관계가 달라져 **세대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④ O: 부과방식은 같은 시점의 보험료 수입을 그 시점의 연금급여 지출에 충당하는 것이 기본이다. 현재의 근로세대가 은퇴세대를 지원하고, 그 근로세대가 은퇴하면 이후의 근로세대가 부담하는 세대 간 이전 구조이다.

따라서 현재 근로세대의 보험료로 현재 은퇴세대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④가 부과방식의 특징이다.

NoteBase

문 12. 고용보험제도의 경제적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업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게을리할 유인이 발생한다.

② 불황일 때 유효수요를 위축시킨다.

③ 실업급여가 증가하면 실업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④ 안정된 직종 근무자와 그렇지 않은 근무자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불황에는 실업급여가 실업자의 소득과 소비를 보완한다. 따라서 고용보험은 유효수요를 더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요 감소를 완화하는 자동안정화장치**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실업급여는 실업 중의 소득 손실을 줄여 주므로 즉시 재취업해야 할 경제적 압박을 낮춘다. 구직 노력은 완전히 관찰하기 어려워 일부 수급자에게 **구직 노력을 줄일 유인**이 생길 수 있다. 이는 보험에 따른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설명한 것이며, 모든 수급자가 실제로 구직을 게을리한다는 뜻은 아니다.

② X: 불황에 실업이 늘면 실업급여 지급이 증가하여 가계의 가처분소득과 소비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고용보험은 **유효수요의 감소를 완화하는 자동안정화장치**로 작용한다. 불황일 때 유효수요를 위축시킨다는 방향이 반대이므로 ②가 옳지 않다.

③ O: 급여가 증가하면 실업 상태를 견디는 비용이 줄고 취업 제의를 수락할 최소 임금인 **유보임금이 높아질 수 있다**. 그 결과 더 적합한 일자리를 기다리는 구직기간이 늘어 실업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며 실제 효과는 제도 설계와 구직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④ O: 고용보험은 공동으로 마련한 재원에서 실업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보험료가 각 개인의 실업위험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위험 공동부담 구조에서는 **실업위험이 낮은 근로자에서 높은 근로자로** 기대 순급여가 이전되는 재분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정된 직종과 불안정한 직종 사이에도 이러한 효과가 나타난다.

NoteBase

문 13. 근로장려세제 도입이 소득과 여가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여가는 정상재이다.)

① 보조금이 점증하는 구간에서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모두 발생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이 평탄한 구간에서는 소득효과만 발생한다.

③ 보조금 변화의 어떤 구간에서도 노동공급은 항상 감소한다.

④ 보조금이 점감하는 구간에서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보조금 점증 구간에서는 실효 한계임금이 올라 **대체효과는 노동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여가가 정상재일 때 노동을 줄이는 소득효과와 반대이므로 노동공급이 항상 감소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며, 점증·평탄·점감 구간에서 추가 근로에 따른 가처분소득의 증가폭이 달라진다. 여가가 정상재라는 조건에서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는 여가를 늘리고 노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① O: 점증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이 늘면 보조금도 늘어나므로 실효 한계임금이 상승한다. 여가의 기회비용이 높아지는 **대체효과는 노동을 늘리는 방향**으로, 소득 증가에 따른 소득효과는 여가를 늘려 노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② O: 평탄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이 늘어도 보조금 액수는 일정하므로 추가 근로에 대한 실효 한계임금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구간 안에서 비교하면 대체효과 없이 **보조금에 따른 소득효과**만 발생하며, 정상재인 여가의 소비를 늘려 노동을 줄이는 방향이다.

③ X: 노동공급이 모든 구간에서 반드시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점증 구간에서는 실효 한계임금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가 노동을 늘리므로, 노동을 줄이는 소득효과와 **서로 반대 방향**이다. 어느 효과가 더 큰지에 따라 노동시간의 순변화가 달라질 수 있다.

④ O: 점감 구간에서는 추가 근로소득이 생기면 보조금 일부가 줄어들므로 실효 한계임금이 낮아진다. 이에 따른 대체효과는 여가를 늘리고 노동을 줄인다. 제도 도입으로 보조금을 받는 데 따른 소득효과도 정상재인 여가를 늘리므로, 이 구간에서는 **두 효과 모두 노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구간별 유인 차이를 무시하고 노동공급이 항상 감소한다고 한 ③이 옳지 않다.

NoteBase

문 14. 빈곤선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라운트리(Rowntree) 방식은 실제 최저생계비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② 라이덴(Leyden) 방식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빈곤선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③ 한 사회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을 빈곤선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④ 빈곤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 평가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는 방식으로 빈곤선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라이덴 방식은 소득 수준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조사하여 빈곤선을 정한다. 따라서 객관적 필수품 기준이 아니라 **주관적 후생 평가에 기초한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라운트리 방식은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식품·의복·주거 등의 수량을 정하고 실제 가격을 적용하여 **필수 생활비를 직접 산출**한다. 이렇게 구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빈곤 여부를 판단하므로 절대적 빈곤선 설정에 해당한다. 단순히 소득분포상의 위치만으로 선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② X: 라이덴 방식은 사람들에게 어떤 소득 수준이 나쁘거나 충분하거나 좋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 소득에 대한 평가를 파악한다. 이러한 **응답자의 주관적 후생 평가**를 이용해 빈곤선을 설정하므로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③ O: 중위소득은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있는 소득이다. 그 일정 비율을 빈곤선으로 삼으면 **해당 사회의 일반적인 소득 수준에 비추어** 빈곤을 판단하는 상대적 기준이 된다. 최저 생활필수품 비용으로 정하는 절대적 빈곤선과 구별된다.

④ O: 최소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얼마의 소득이 필요한지, 또는 각 소득 수준이 얼마나 충분한지 등을 설문으로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하는 생활 수준**을 토대로 정하는 것이 주관적 빈곤선이다. 따라서 주관적 설문 방식 자체도 가능한 설정 방법이다.

NoteBase

문 15. 공공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방서비스와 경찰서비스가 대표적인 예이다.

② 공공재의 비경합성은 공공재의 추가적인 소비에 따른 한계비용이 0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③ 클럽재는 비배제성의 특성을 가진다.

④ 수요표출 메커니즘을 통해 공공재의 최적 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클럽재는 회원이나 요금 납부자만 이용하도록 제한할 수 있으므로 **배제성이 있다**. 혼잡이 생기기 전에는 비경합적이라는 점에서 순수한 사적재와 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국방과 사회 전반의 치안은 특정인이 혜택을 누린다고 다른 사람의 혜택이 바로 줄어들지 않고, 비용을 내지 않은 사람만 혜택에서 배제하기도 어려워 공공재의 대표적 사례로 든다. 개별 사건에 투입되는 경찰 인력처럼 혼잡이나 자원 제약이 있는 서비스까지 모두 순수공공재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

② O: 공공재의 비경합성은 이미 공급된 공공재를 추가 사람이 이용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용 가능량이 줄지 않는 성질이다. 이를 비용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를 한 명 더 추가하는 데 드는 한계비용이 0**이라는 뜻이다. 공공재 자체를 한 단위 더 생산하는 비용까지 0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③ X: 클럽재는 이용료를 내거나 회원 자격을 갖춘 사람만 이용하도록 제한할 수 있어 **배제성이 있다**. 혼잡이 발생하기 전에는 한 사람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비경합성을 가지지만, 회원 수가 늘어 혼잡해지면 경합성이 나타날 수 있다.

④ O: 공공재는 무임승차 유인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지불의사를 숨기기 쉽다. 적절하게 설계된 수요표출 메커니즘은 진실한 선호를 드러내도록 유인을 제공하여, 필요한 이론적 조건 아래에서 **개인별 한계편익의 합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효율적 공급량을 선택하게 할 수 있다. 모든 현실적 제도가 자동으로 최적량을 달성한다는 주장은 아니다.

따라서 클럽재를 비배제적이라고 설명한 ③이 옳지 않다.

NoteBase

문 16. 공공재 공급에 있어 클라크-그로브즈(Clarke-Groves)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인은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는 것이 우월전략이다.

② 파레토 효율적인 공공재 공급과 예산균형을 달성한다.

③ 공공재 공급량은 개인이 표출한 선호와 무관하게 결정된다.

④ 개인의 조세부담은 자신이 표출한 선호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클라크-그로브즈 메커니즘은 **진실한 선호 표출이 우월전략**이 되도록 부담을 설계한다. 효율적인 공공재 공급을 유도하지만 예산균형까지 일반적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선지별 해설

클라크-그로브즈 메커니즘은 사람들이 공공재의 가치를 신고하게 하고, 신고된 총편익에서 비용을 뺀 값을 극대화하도록 공급을 결정한다. 표준 모형에서는 각자의 가치가 사적 가치이며 금전 이전에 대한 효용이 선형인 준선형 효용을 전제로 한다.

① O: 개인의 부담에 그 개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면, 자신의 순편익을 높이는 선택이 사회적 순편익을 높이는 선택과 일치하도록 유인이 맞춰진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신고와 관계없이 진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약한 우월전략이다. 거짓 신고가 진실한 신고보다 유리하지 않다는 뜻이므로 ①이 적절하다.

② X: 진실한 신고를 유도하여 효율적인 공공재 공급 결정을 얻을 수 있지만 **징수액과 공급비용이 정확히 일치하는 예산균형은 일반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효율적인 공급 결정과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는지는 별개의 조건이다.

③ X: 공급량은 개인들이 신고한 편익을 합한 값과 공급비용에 따라 결정된다. 즉 **신고된 선호가 사회적 순편익 계산에 반영**된다. 어느 한 사람의 신고 변화가 특정 경우에 결과를 바꾸지 않을 수는 있어도, 공급 결정 규칙 자체가 선호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

④ X: 개인의 조세부담은 자기 신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신고와 그에 따른 선택 결과를 이용하여 정한다. 클라크의 피벗 방식은 해당 개인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의 순편익에 미치는 손실**을 부담시키는 방식이다. 따라서 자신의 신고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NoteBase

문 17. 3명의 투표자가 대안 A, B, C에 대해 다음의 표와 같은 선호의 강도를 가지고 있다. 다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투표자	선호의 강도		
	대안 A	대안 B	대안 C
1	5	3	2
2	5	1	4
3	0	9	1

① 투표자들이 진실된 선호를 표출할 때, 총점 10점의 점수투표제를 적용하면 B가 선택된다.

② 점수투표제 하에서 일부 투표자는 거짓 선호를 표출할 유인이 있다.

③ 꽁도세 승자(Condorcet winner)는 B이다.

④ 투표자들이 진실된 선호를 표출할 때, 보다(Borda) 투표제를 적용하면 A가 선택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A는 B와의 일대일 다수결에서도, C와의 일대일 다수결에서도 2 대 1로 이긴다. 따라서 모든 다른 대안을 쌍대비교에서 이기는 **꽁도세 승자는 A**이며, 점수합이 가장 높은 B와 구별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표에서 투표자 1의 선호순서는 A > B > C, 투표자 2는 A > C > B, 투표자 3은 B > C > A이다. 점수투표는 선호의 강도를 더하지만, 쌍대비교와 보다 투표는 선호순위를 이용한다.

① O: 각 투표자의 점수 합은 10점이다. 진실한 점수를 합하면 A는 5+5+0=10점, B는 3+1+9=13점, C는 2+4+1=7점이므로 **총점이 가장 높은 B**가 선택된다.

② O: 예를 들어 A를 가장 좋아하는 투표자 1이 실제 점수 5·3·2 대신 A에 10점, B와 C에 0점을 주면, 나머지 두 사람의 점수가 그대로일 때 총점은 A 15점, B 10점, C 5점이 된다. 결과가 B에서 자신이 더 선호하는 A로 바뀌므로 **선호 강도를 과장할 유인**이 있다.

③ X: 꽁도세 승자는 다른 모든 대안과의 일대일 다수결에서 이기는 대안이다. A와 B를 비교하면 투표자 1·2가 A를 지지하여 A가 2 대 1로 이긴다. A와 C를 비교해도 투표자 1·2가 A를 지지하여 A가 2 대 1로 이긴다. 따라서 꽁도세 승자는 **B가 아니라 A**이다.

④ O: 보다 투표에서 1위에 2점, 2위에 1점, 3위에 0점을 주면 투표자별 점수는 A·B·C 순으로 각각 (2,1,0), (2,0,1), (0,2,1)이다. 합계는 A 4점, B 3점, C 2점으로 A가 선택된다. 1·2·3위에 3·2·1점을 주어도 모든 대안에 같은 총점이 더해지므로 결과는 같다.

따라서 꽁도세 승자를 B라고 한 ③이 옳지 않다.

NoteBase

문 18.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들은 항상 공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② 본인-대리인 문제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③ 관료들은 직책상의 특권을 추구하기도 한다.

④ 관료들이 예산극대화를 추구하면 공공재가 초과공급될 수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공공선택론에서는 관료도 **예산·권한·승진 등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관료의 목표가 항상 공익 극대화와 일치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선지별 해설

① X: 공공선택론은 관료도 보수·승진·권한·조직 규모 등 **자신의 효용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주체**로 분석한다. 사익과 공익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항상 공익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단정이 틀리다. 이는 모든 관료가 언제나 공익을 무시한다는 반대 단정도 아니다.

② O: 국민이나 정치인이 본인이고 관료가 대리인인 관계에서, 본인은 관료의 노력과 행동을 완전히 관찰하기 어렵다. 관료가 이러한 **감시의 한계와 정보 비대칭**을 이용하여 노력을 줄이거나 사익을 추구하면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

③ O: 관료가 얻는 편익에는 금전적 보수 외에도 직책에 따른 권한·위신·업무 편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직책상의 특권을 늘리려는 유인**도 관료의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요소가 된다.

④ O: 예산극대화 모형에서 관료는 조직 예산과 사업 규모를 늘리려는 유인을 가진다. 예산 승인자가 비용 정보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등의 조건에서는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효율적 공급량**보다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다. 예산 증가 자체가 항상 초과공급이라는 뜻은 아니며, 효율적 수준을 넘는지가 기준이다.

NoteBase

문 19.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유자원의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② 경합성과 배제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③ 연근해 어장의 자원이 고갈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④ 적정 수준의 요금 부과로 방지할 수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공유자원은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하기 어려운** 자원이다. 다른 사람의 몫을 줄이면서도 접근을 막기 어려워 과잉 이용이 생기므로, 경합성과 배제성이 함께 있다는 설명이 틀리다.

선지별 해설

① O: 소유권이나 이용 규칙이 명확하지 않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면 이용자가 자원을 먼저 많이 사용하려는 유인을 가진다. 자신의 이용으로 다른 사람의 몫이 줄어드는 비용을 충분히 부담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과다 이용**이 발생할 수 있다. 공동 소유라는 이름만으로 반드시 비극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효과적인 관리 규칙이 있으면 억제할 수 있다.

② X: 공유자원의 특징은 **경합성과 비배제성**이다. 한 사람이 자원을 이용하면 다른 사람의 이용 가능량이 줄어들지만, 이용에서 사람들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경합성과 배제성이 함께 있는 것은 통상 사적 재화의 특성이므로 ②의 설명이 틀리다.

③ O: 접근과 어획량 통제가 부족한 어장에서는 한 어민의 어획이 다른 어민이 잡을 수 있는 자원을 줄인다. 개별 어민이 이러한 **자원 감소의 외부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남획과 자원 고갈이 발생할 수 있어 공유지의 비극을 보여 준다.

④ O: 자원 이용량에 따라 외부비용을 반영한 적정 요금을 부과하고 이를 집행하면, 이용자가 자신의 이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로써 과도한 이용을 줄일 수 있다. 한계 이용을 바꾸지 않는 단순한 정액 부담과 달리, 추가 이용의 비용을 높이는 설계가 중요하다.

NoteBase

문 20. A지역의 교육서비스 소비는 긍정적 외부성을 발생시킨다. 교육서비스를 Q단위 소비할 때, 사적 한계편익은 $PMB = 24 - 2Q$이고 외부 한계편익은 $EMB = 12 - Q$로 나타난다. 교육서비스의 한계비용이 6일 때,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① 10

② 6

③ 4

④ 2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긍정적 외부성이 있으므로 사회적 한계편익은 두 편익을 더한 $SMB = 36 - 3Q$이다. 이를 한계비용 6과 같게 놓으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10단위이다.

계산 과정

교육서비스 소비에는 긍정적 외부성이 있으므로 소비자 자신의 편익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발생하는 외부편익도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한계편익은 **사적 한계편익과 외부 한계편익의 합**이다.
alignedSMB&=PMB+EMB&=(24-2Q)+(12-Q)=36-3Qaligned

추가적인 생산 측 외부비용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주어진 한계비용 6을 사회적 한계비용으로 사용한다. 사회적 최적량은 마지막 한 단위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이 같아지는 조건 $SMB = MC$에서 구한다.
$36 - 3Q = 6$
$3Q = 30$
$Q = 10$

Q=10일 때 사적 한계편익은 4, 외부 한계편익은 2로, 두 편익의 합 6이 한계비용 6과 같다. 사회적 한계편익은 Q가 늘수록 감소하므로 10단위보다 적을 때는 추가 공급의 순편익이 양수이고, 많을 때는 음수이다. 따라서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10단위**로 ①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21. 오염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오염배출권 발행량은 시장에서 결정된다.
나. 오염물질 정화 비용이 낮은 기업은 배출권을 판매한다.
다.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 상황의 변화에 쉽게 적응한다.
라. 배출권의 초기 할당 방식과 무관하게 오염물질 정화에 드는 사회적인 총비용을 효과적으로 감축시킨다.

① 가, 나
② 가, 나, 라
③ 다, 라
④ 나, 다, 라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정부는 **배출권 총량**을 정하고 시장은 거래가격을 결정한다. 거래를 통해 정화비용이 낮은 기업이 더 많이 정화하므로, 표준적인 경쟁시장 조건에서 총정화비용을 줄일 수 있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가. X: 배출권의 총발행량은 정부가 허용하려는 오염배출 총량에 맞추어 정한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 것은 **발행량이 아니라 배출권 가격**이다. 총량을 정한 뒤 기업 사이에서 거래를 허용한다는 구조를 구별해야 한다.

나. O: 추가로 오염을 줄이는 한계정화비용이 배출권 가격보다 낮으면 직접 정화하는 편이 유리하다. 비용이 낮은 기업은 정화를 더 하고 **남는 배출권을 판매**하며, 비용이 높은 기업은 배출권을 구매하는 방향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실제 순판매량은 초기 보유량에도 영향을 받지만, 이 선택지는 비용 차이에 따른 거래 유인을 설명한다.

다. O: 인플레이션이나 정화비용 변화가 생기면 배출권 수요와 시장가격이 이에 반응한다. 따라서 명목 세율을 고정해 둔 오염세와 달리 **가격이 시장에서 조정**되어 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한다. 이는 허용 총배출량도 자동으로 늘어난다는 뜻은 아니다.

라. O: 경쟁적인 거래가 가능하고 거래비용 등의 왜곡이 없다면, 기업들은 한계정화비용과 배출권 가격이 같아질 때까지 정화량과 거래량을 조정한다. 그 결과 **기업 간 한계정화비용이 같아져** 주어진 총량 목표를 최소비용으로 달성한다. 초기 할당은 이익과 부담의 분배를 바꾸지만 이러한 비용 최소화 결과는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 표준 모형의 결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나·다·라이며 ④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22. 시점 간(intertemporal) 소비 선택 모형에서 현재와 미래의 소비 C_1, C_2에 대한 선호가 $U(C_1, C_2) = \min\{C_1, C_2\}$로 주어진다. 현재의 소득이 10이고, 현재 소비하고 남은 소득은 모두 저축한다. 미래의 소득은 0이고, 저축에는 이자율 r이 적용된다. 이자소득에 대해 비례세율로 과세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0<r<1$이다.)

① 이 소비자는 항상 현재와 미래의 소비를 동일하게 유지한다.

② 과세 후 (C_1, C_2) 공간에 표시되는 예산선은 완만해진다.

③ 과세로 인한 소득효과는 저축을 감소시킨다.

④ 과세로 인한 대체효과는 0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완전보완 선호에서는 대체효과가 0이고, 이자소득 과세로 구매력이 줄면 현재소비도 감소한다. 현재 소득이 10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현재소비 감소는 저축 증가**를 뜻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이자소득세율을 t라 하면 세후 이자율은 $\rho = r(1-t)$이다. 저축은 $S = 10 - C_1$이고 미래 소득은 없으므로 예산식은 $C_2 = (10 - C_1)(1 + \rho)$이다. 원금 전체가 아니라 **이자소득에만 과세**하므로 저축 1단위의 미래 수령액은 $1 + \rho$이다.

① O: 효용이 $\min\{C_1, C_2\}$이므로 두 시점의 소비는 1 대 1의 완전보완 관계이다. 어느 한 시점의 소비만 상대적으로 더 늘려도 효용은 높아지지 않으므로, 양의 가격과 주어진 예산 아래 최적점은 $C_1 = C_2$인 꺾인 점에서 결정된다.

② O: C_1을 가로축, C_2를 세로축에 놓으면 예산선 기울기는 $-(1 + \rho)$이다. 이자소득 과세로 ρ가 r보다 낮아지면 기울기의 절댓값이 작아지므로 예산선은 완만해진다. 현재소비의 가로축 절편 10은 그대로이고 세로축 절편은 낮아진다.

③ X: 과세로 저축 수익이 줄면 소비자의 구매력이 낮아져 현재와 미래의 소비가 함께 감소한다. 그러나 현재 소득은 10으로 고정되어 있어 현재소비가 감소하면 **저축 $S = 10 - C_1$은 증가**한다. 실제로 $C_1 = C_2$를 예산식에 대입하면 $C_1 = \frac{10(1+\rho)}{2+\rho}$, $S = \frac{10}{2+\rho}$이며, ρ가 낮아지면 S는 커진다.

④ O: 완전보완재에서는 효용을 일정하게 유지할 경우 두 재화의 소비량이 같은 비율로 고정된다. 상대가격이 변해도 보상된 최적 소비묶음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대체효과는 0**이다. 이 문항에서 과세에 따른 소비와 저축의 변화는 소득효과로 설명된다.

따라서 소득효과가 저축을 감소시킨다고 한 ③이 옳지 않다.

NoteBase

문 23.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투자세액을 공제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② 자본의 사용자비용은 기업이 자본재를 보유하고 사용하는 데 소요되는 기회비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③ 가속상각제도를 채택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증가한다.

④ 한계실효세율이 음(-)의 값을 가지면 기업의 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가속상각은 감가상각 공제를 앞당겨 **세금 절감액의 현재가치를 높인다**. 따라서 통상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낮추어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투자세액공제는 일정한 투자에 대해 납부할 법인세액을 줄이는 방식이다. 기업의 **세후 실질 투자비용을 낮추어** 투자의 수익성을 높이므로, 다른 조건이 같으면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과세소득에서 금액을 빼는 소득공제와 세액 자체를 줄이는 세액공제는 구별한다.

② O: 자본의 사용자비용은 자본재를 일정 기간 보유·사용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비용이다. 자본에 묶인 자금을 다른 곳에 운용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과 경제적 감가상각 등을 반영하므로 **자본 사용의 기회비용**으로 해석한다. 단순히 자본재를 구입할 때 지급한 가격 전체와 같은 개념은 아니다.

③ X: 가속상각은 감가상각 공제를 투자 초기로 앞당긴다. 양의 할인율 아래에서 공제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다면, 총명목 공제액이 같아도 **세금 절감액의 현재가치가 커진다**. 그 결과 자본의 사용자비용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 투자 유인이 커지므로 ③이 옳지 않다.

④ O: 한계실효세율이 음수라는 것은 한계투자에 세제가 순부담이 아니라 **순보조 효과**를 준다는 뜻이다. 공제·세액공제 등 혜택으로 필요한 세전 수익률과 사용자비용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기업의 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 이는 법정 법인세율 자체가 음수라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문 24. A시가 공공서비스 Q단위를 생산하는 데 드는 총비용은 C(Q)=12+2Q이고, 개별 소비자의 수요곡선은 P=10-Q이다. 이부가격제도를 적용해 최적 수준을 공급할 때, 개별 소비자가 지불하는 단위당 가격은? (단, P는 가격이고, Q는 수량이다.)

① 2

② 4

③ 6

④ 8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효율적인 이부가격제에서는 **단위당 사용가격을 한계비용**과 같게 정한다. $C(Q) = 12 + 2Q$의 한계비용은 2이므로 단위당 가격도 2이다.

계산 과정

이부가격제는 이용 여부에 따라 내는 고정요금과 이용량에 비례하는 사용요금을 구분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고정요금이 아니라 **추가 1단위 이용에 적용되는 가격**을 묻는다. 효율적인 소비량을 유도하려면 단위당 가격을 한계비용과 같게 설정한다.

총비용 $C(Q) = 12 + 2Q$에서 12는 생산량에 관계없는 고정비용이고, 생산량이 1단위 늘 때 비용은 2만큼 증가한다. 따라서 한계비용은 MC=2이며, 단위당 가격은 P=MC=2이다.

수요곡선 $P = 10 - Q$에 P=2를 대입하면 Q=8이다. 이 수량에서는 소비자의 마지막 단위 지불의사 2와 추가 공급비용 2가 일치한다. 고정비용은 별도의 고정요금으로 회수하도록 설계하며, 소비자 수나 고정요금의 구체적인 배분은 이 문제에서 단위당 가격을 구하는 데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구하는 단위당 가격은 **2**로 ①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25.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독점이 발생할 수 있다.

② 수도와 전기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③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공공요금을 설정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④ 평균비용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공공요금을 설정하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평균비용 요금은 **총비용 회수**의 기준이고, 효율적 자원배분의 기준은 **가격과 한계비용의 일치**이다. 규모의 경제가 있는 구간에서는 두 기준이 달라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규모의 경제가 시장 수요를 공급하는 범위에서 지속되면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평균비용이 낮아진다. 이때는 **한 기업이 공급하는 것이 여러 기업이 나누어 공급하는 것보다 저렴**할 수 있어 자연독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규모의 경제가 일부 구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산업이 자연독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② O: 수도 관로와 전기의 송배전망은 설치에 큰 고정비용이 들며, 이용자와 공급량이 늘어나면 그 비용을 더 넓게 분담할 수 있다. 이러한 **공급망의 높은 고정비용**이 규모의 경제를 설명한다. 전력산업의 모든 부문이 동일한 비용 구조를 갖는다는 뜻은 아니다.

③ O: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다. 요금을 한계비용과 같게 정하면 **단위당 수입이 평균비용에 미달**하므로 총수입으로 총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수 있다. 효율적인 가격을 정하는 문제와 적자를 보전하는 문제는 구별해야 한다.

④ X: 평균비용 요금은 총비용 회수를 가능하게 하지만, 자원배분의 효율성 기준은 **가격과 한계비용의 일치**이다. 평균비용이 한계비용보다 높은 구간에서 평균비용 요금을 적용하면 소비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추가 단위의 가치가 생산비용보다 큰데도 공급되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 따라서 수지균형을 달성한다고 해서 최선의 효율적 자원배분까지 달성하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26. 정부의 국채 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화주의학파에 의하면 국채 발행은 구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② 케인즈학파에 의하면 국채 발행을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면 총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③ 러너(A. Lerner)에 의하면 내부부채(internal debt)가 발생할 때 미래세대 전체에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

④ 리카도의 대등정리가 현실에서 성립한다면 국채 발행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러너는 내부부채 상환을 **같은 나라의 납세자와 채권자 사이의 이전**으로 보았다. 따라서 미래세대 전체에 추가적인 순부담이 생긴다는 설명은 그의 견해와 반대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통화주의학파는 통화량 확대 없이 국채로 정부 지출을 조달하면 금리가 상승하여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구축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정부 지출 증가의 총수요 확대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 구축효과의 정도는 경제 상황과 민간투자의 금리 반응 등에 따라 달라진다.

② O: 케인즈학파의 관점에서는 정부 지출을 유지하면서 국채로 감세를 충당할 때 현재 가처분소득이 늘고 그 일부가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소비 증가를 통해 총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 이는 현재 감세분을 모두 저축한다는 리카도 대등정리의 결과와 구별된다.

③ X: 러너는 국내에서 보유하는 내부부채의 상환을 **국내 납세자에서 국내 채권자로의 이전**으로 본다. 따라서 미래세대 내부의 소득 배분은 바뀌어도 미래세대 전체가 상환 때문에 추가적인 순부담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것을 내부부채가 언제나 경제적 비용을 전혀 만들지 않는다는 일반 명제로 확대하면 안 된다.

④ O: 리카도의 대등정리가 성립하면 현재의 감세는 같은 현재가치의 미래 조세 증가로 인식되어 소비가 늘지 않고 민간저축이 늘어난다. 세대 간 이타적 연결과 유산 이전 등이 작동하는 모형에서는 **미래 조세부담이 물려받는 자산으로 상쇄**되어 감세를 국채로 조달했다는 이유만으로 미래세대에 순부담이 전가되지 않는다. 완전한 자본시장과 일괄세 등의 강한 전제 아래의 결론이다.

NoteBase

문 27. 정부의 재정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세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②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정부의 실질적 부담이 줄어든다.

③ 경기부양 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재량이 줄어든다.

④ 재정적자를 국채로 충당하면 이자율은 반드시 하락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국채 발행을 통한 적자 조달은 정부의 차입 수요를 늘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이자율 상승 압력**을 줄 수 있다. 이자율이 반드시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다른 조건이 같다면 감세는 정부의 조세수입을 줄인다. 지출이 함께 줄거나 다른 수입이 충분히 늘지 않으면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재정적자가 발생하거나 기존 적자가 커질 수 있다. 감세가 언제나 적자를 만든다는 뜻은 아니다.

② O: 적자 누적으로 발생한 채무가 명목금액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물가 상승으로 **그 채무의 실질가치가 감소**한다. 명목채무를 D, 물가수준을 P라 하면 실질채무는 $\frac{D}{P}$이다. 다만 물가연동채나 외화표시채무까지 같은 효과라고 일반화할 수 없으며, 예상 인플레이션이 신규 차입금리에 반영되는 효과도 구별해야 한다.

③ O: 재정적자가 누적되면 채무와 이자지출이 늘고 차입 여력이나 재정건전성에 대한 제약이 커질 수 있다. 그러면 경기침체 때 추가 지출이나 감세를 통해 경기부양을 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줄어든다. 이는 경기부양이 완전히 불가능해진다는 뜻은 아니다.

④ X: 국채 발행은 정부가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므로, 다른 조건이 같고 자금 공급이 제한되어 있으면 대부자금 수요를 늘려 **이자율을 상승시키는 압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가 줄어드는 구축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통화정책과 경기 상황 등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지지만 이자율이 반드시 하락한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채로 적자를 조달하면 이자율이 반드시 하락한다고 한 ④가 옳지 않다.

NoteBase

문 28. 국세와 지방세를 순서대로 바르게 짝 지은 것은?

① 농어촌특별세-지역자원시설세

② 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

③ 법인세-양도소득세

④ 담배소비세-주세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농어촌특별세는 **국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이다. 세목의 목적이나 명칭이 아니라 과세 주체에 따라 구분한다.

선지별 해설

국세와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국가의 조세인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인 지방세를 각각 앞뒤에 배치했는지 확인한다.

① O: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이다. 따라서 제시된 순서가 국세－지방세에 해당한다.

② X: 교육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모두 국세**이므로 국세－국세의 조합이다. 교육세와 이름이 비슷한 지방교육세가 지방세이며, 두 세목을 구별해야 한다.

③ X: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는 **모두 국세**이다. 양도소득세는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이다. 별도의 지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자체를 혼동하면 안 된다.

④ X: 담배소비세는 지방세이고 주세는 국세이므로 **지방세－국세**의 순서이다. 요구된 순서로 고치려면 주세－담배소비세가 되어야 한다.

NoteBase

문 29.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재원이 아닌 것은?

① 보통교부세

② 소방안전교부세

③ 부동산교부세

④ 조정교부금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부동산교부세와 이전 주체가 다르다.

개념 구분

재원이 지방정부에 들어온다는 사실만으로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문항에서는 **재원을 이전하는 주체**가 중앙정부인지 다른 지방정부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을 보완하고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는 지방교부세이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안전 분야의 재정수요를 지원하는 지방교부세이며, 부동산교부세 역시 지방교부세의 한 종류이다. 이들은 모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재원에 속한다.

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여 지역 내 재정 격차 등을 조정하는 재원이다. 시·군 조정교부금과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이에 해당하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직접 이전하는 지방교부세와 구별된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조정교부금인 ④이다.

NoteBase

문 30. 우리나라의 교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교부세는 대응교부금이다.

② 국고보조금은 무조건부교부금이다.

③ 국고보조금의 증가는 재정자주도를 개선한다.

④ 지방교부세는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보완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의 재원을 지방정부로 이전**하여 지방의 부족한 재원을 보완한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 사이의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대응교부금은 지방정부가 일정한 사업비를 부담하면 그에 대응하여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방교부세는 이러한 지방비 매칭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의 부족분 등을 보완하는 비대응 이전재원**이다. 용도 제한 여부와 대응 부담 여부는 서로 다른 분류 기준이다.

② X: 국고보조금은 특정 사업이나 목적을 정하여 지원하므로 **조건부교부금**에 해당한다. 지방정부가 아무 용도로나 자유롭게 사용하는 무조건부 재원으로 볼 수 없다.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용도상 차이를 구별해야 한다.

③ X: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은 그 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재원이 일정한 상태에서 국고보조금만 늘면 분모인 예산규모가 커져 재정자주도는 낮아진다. 전체 재원 증가와 자율성 비율 상승은 같은 말이 아니다.

④ O: 수직적 재정 불균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세입 확보 능력과 지출 책임이 어긋나는 문제이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의 재원을 지방에 이전**하여 지방의 부족한 재원을 보완하므로 이를 완화한다.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재정력 격차를 줄이는 수평적 조정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NoteBase

문 31. 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정과세는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과된다.

② 술이나 담배 등과 같이 건강에 해로운 것에 부과되는 세금은 죄악세에 해당한다.

③ 정부의 예정된 보유세 강화 정책은 부동산 수요를 급격히 위축시킬 수 있다.

④ 중립세는 민간부문의 경제행위에 교란을 일으키지 않는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교정과세는 외부비용 등을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반영하여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교정**하는 세금이다.
소득분배의 형평성 개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세와 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교정과세는 부정적 외부효과 등으로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달라지는 문제를 바로잡아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예를 들어 오염에 따른 외부비용을 세금으로 부담시키면 과도한 오염 배출을 줄일 유인이 생긴다. 소득분배의 형평성 개선을 주목적으로 하는 재분배 정책과 구별해야 한다.

② O: 술이나 담배처럼 건강에 해롭거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재화에 부과되는 세금을 흔히 죄악세라고 한다. 소비 억제와 사회적 비용의 부담 등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죄악세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세율이 외부비용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뜻은 아니다.

③ O: 보유세 강화가 예고되면 미래에 부동산을 보유하는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상 보유비용 증가가 현재의 구매 판단에 반영**되면 투자수익 기대와 지불의사가 낮아져 시행 전에도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 실제 변화의 크기는 정책 규모와 시장의 기대 등에 따라 달라진다.

④ O: 중립세는 상대가격이나 경제주체의 한계적인 선택 유인을 왜곡하지 않아 자원배분에 교란을 일으키지 않는 조세를 말한다. 조세 납부로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까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대체효과와 초과부담을 유발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교정과세의 주된 목적을 분배의 형평성 개선으로 설명한 ①이 옳지 않다.

NoteBase

문 32.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는 완전경쟁시장에서 종량세의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비자와 생산자 누구에게 부과해도 경제적 귀착은 동일하다.

② 생산자에게 부과하면, 생산자가 받는 가격과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모두 상승한다.

③ 공급곡선이 완만할수록 소비자에게 귀착되는 부담이 증가한다.

④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일수록 소비자에게 귀착되는 부담은 증가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종량세는 소비자 가격과 생산자의 세후 수취가격 사이에 차이를 만든다. 주어진 시장에서는 **소비자 가격은 상승하고 생산자의 세후 수취가격은 하락**하므로 두 가격이 모두 오른다는 설명이 틀리다.

선지별 해설

종량세는 거래 한 단위마다 일정한 세액을 부과한다. 소비자 지불가격을 Pc, 생산자의 세후 수취가격을 Pp, 단위당 세액을 t라고 하면 $P_c - P_p = t$가 된다. 조세 귀착에서는 세금을 누가 납부하는지보다 누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지를 본다.

① O: 같은 종량세라면 소비자에게 납세의무를 주든 생산자에게 주든 두 가격 사이에 동일한 세금 쐐기가 생긴다. 표준적인 완전경쟁 모형에서 균형가격과 거래량은 같아지므로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은 구별**된다. 실질 부담 배분은 수요·공급의 상대적 가격탄력성에 따라 정해진다.

② X: 우하향 수요와 우상향 공급에서 종량세가 부과되면 거래량이 줄고, **소비자 지불가격은 오르지만 생산자의 세후 수취가격은 내려간다**. 생산자가 소비자에게서 받은 금액 중 세금을 납부한 뒤 실제 남는 가격을 비교해야 한다. 두 가격이 모두 상승한다는 ②가 틀리다.

③ O: 같은 초기 균형점과 수요 조건에서 공급곡선이 더 완만하면 공급은 가격 변화에 더 탄력적으로 반응한다. 생산자는 세후 가격 하락에 대응해 공급을 쉽게 줄일 수 있으므로 **생산자의 부담 비중은 작고 소비자의 부담 비중은 커진다**. 단순히 축의 단위가 다른 그림의 기울기를 비교하는 것은 아니다.

④ O: 공급 조건이 같을 때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소비자는 가격이 올라가도 구매량을 많이 줄이지 못한다. 따라서 **가격 상승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담 비중**이 커진다. 일반적으로 수요와 공급 중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쪽이 더 큰 조세부담을 진다.

NoteBase

문 33. 초과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초과부담은 조세로 인한 자중손실이다.

②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재화의 수요가 가격에 탄력적일수록 물품세 부과에 따른 초과부담은 작아진다.

③ 조세가 초과부담을 일으키는 이유는 조세 부과로 인해 효율적 자원배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④ 초과부담은 조세가 가져오는 실제 부담에서 조세 징수액을 뺀 값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같은 과세 조건에서 수요가 가격에 탄력적일수록 거래량이 더 크게 줄어 유익한 거래의 손실도 커진다. 따라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초과부담은 더 커지는 방향**이지 작아지는 것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조세로 감소한 민간의 잉여 중 정부의 조세수입으로 이전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남는 순후생 손실이 초과부담이다. 이는 누구에게도 이전되지 않고 사라진 **자중손실**에 해당한다.

② X: 다른 조건과 세금의 크기가 같다면 수요가 가격에 더 탄력적일수록 과세에 따른 가격 변화에 소비량이 더 크게 반응한다. 그 결과 원래 성립하던 유익한 거래가 더 많이 사라져 **초과부담은 더 커지는 방향**이다. 공급 조건과 세율 등을 달리하면서 탄력성만으로 모든 결과를 비교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③ O: 외부효과 등 기존 왜곡이 없는 경쟁시장에서는 가격이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을 연결한다. 물품세가 부과되면 구매자 지불가격과 판매자 수취가격 사이에 격차가 생겨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거래량에서 벗어난다. 이처럼 **효율적인 거래가 줄어드는 것**이 초과부담의 원인이다. 기존 외부효과를 바로잡는 교정세의 효과와는 구별해야 한다.

④ O: 조세의 실제 부담을 금전적으로 평가한 후생 감소라고 할 때, 그중 조세 징수액은 민간에서 정부로 이전된 금액이다. 초과부담은 이 조세수입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후생 손실이므로 실제 부담에서 조세 징수액을 뺀 값으로 나타낸다. 납부세액 자체와 초과부담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된다.

따라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초과부담이 작아진다고 한 ②가 옳지 않다.

NoteBase

문 34. 콜렛-헤이그(Corlett-Hague)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세부담의 형평성 개선과 관련된다.

② 차등 세율을 적용한 물품세는 효율적일 수 없다.

③ 여가와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상품에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④ 조세부담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여가에 직접 과세하기 어려우므로 **여가와 보완적인 상품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여가에 간접 과세하여 노동공급의 왜곡을 줄이려는 효율성 원칙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콜렛-헤이그 법칙은 필요한 조세수입을 확보하면서 **노동과 여가 사이의 왜곡 및 조세 초과부담을 줄이는 효율성**에 관한 원칙이다. 소득계층별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는 형평성 원칙을 직접 설명한 것은 아니다.

② X: 여가에 직접 과세할 수 없는 제약이 있으면 모든 상품에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언제나 가장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상품마다 여가와 맺는 보완·대체 관계를 고려한 **차등 세율이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③ O: 여가와 상대적으로 더 보완적인 상품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 그 상품과 함께 소비되는 여가의 매력이 낮아진다. 이러한 대체효과는 **여가에 간접적으로 과세**하는 역할을 하여 기존 조세가 노동공급을 위축시키는 왜곡을 완화한다. 따라서 여가 보완재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③이 적절하다.

④ X: 여가의 비과세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해야 할 처방이 아니라 **직접 과세하기 어렵다는 주어진 제약**이다. 그 제약 때문에 생기는 왜곡을 여가 보완재에 대한 과세로 일부 보완하자는 것이 이 법칙이다. 여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면 효율성이 개선된다는 설명은 출발 조건과 정책 결론을 혼동했다.

NoteBase

문 35. 우리나라의 법인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세는 종량세에 해당된다.

② 법인세는 직접세에 해당된다.

③ 법인을 조세주체로 하고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를 말한다.

④ 법인세의 부과로 법인소득 단계와 개인소득 단계에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 1번

①

법인세는 화폐금액으로 표시한 소득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종가세**이다. 종량세는 중량·용량·개수 등 물리적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LlRoeeYqoIMvFAmeSUH-0PgcINGbMmDB.webp

②

법인세는 소득을 얻은 법인에 납세의무를 지우며, **법률상 세부담의 전가를 예정하지 않는 직접세**로 분류한다.

NoteBase

③

법인세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12.30>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0.12.22, 2022.12.31>
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 · 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④

법인의 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한 뒤 그 이익을 개인주주에게 배당하면 배당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처럼 **동일한 소득에 법인 단계와 개인주주 단계에서 각각 과세**되어 경제적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NoteBase

문 36. 최적의 조세와 관련된 램지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요가 가격에 대해 탄력적인 상품일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② 모든 상품에 대해 똑같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③ 대체로 생활필수품에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④ 조세 부과에 따른 시장 교란이 작은 상품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램지법칙은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면서 초과부담을 줄이도록 세율을 정하는 원리이지, **모든 상품에 동일 세율을 요구하는 법칙이 아니다**. 단순한 역탄력성 원리에서는 수요가 비탄력적인 상품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선지별 해설

램지법칙은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면서 조세의 초과부담을 최소화하는 상품과세 원리이다. 재화 사이의 교차가격효과 등을 배제하는 단순한 경우에는 세율을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반대 방향으로 정하는 **역탄력성 원리**로 설명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교차효과와 보상수요도 고려해야 한다.

① O: 수요가 탄력적이면 과세에 따른 가격 변화로 소비량이 크게 감소하여 효율성 손실이 커지기 쉽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이런 상품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교란을 줄이는 것이 역탄력성 원리에 부합한다.

② X: 모든 상품에 무조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라는 법칙이 아니다. 상품별 수요 반응과 과세에 따른 후생 손실을 고려하여 세율을 차등화한다. 관련 탄력성이 같다는 등의 특별한 조건에서는 동일 세율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결론은 아니다.

③ O: 생활필수품은 대체로 가격이 올라도 소비를 크게 줄이기 어려워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역탄력성 원리만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도출된다. 다만 이는 **효율성 중심의 결론**이며, 저소득층 부담과 분배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정책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④ O: 과세에 따른 수요 감소와 자원배분의 교란이 작은 상품은 같은 세수를 확보하는 데 따르는 추가 후생 손실이 상대적으로 작다. 따라서 이런 상품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초과부담 최소화 방향이다.

따라서 모든 상품에 똑같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 ②가 옳지 않다.

NoteBase

문 37.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세율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역진적이다.

② 최종소비재가 면세 대상이 되면 최종소비 단계에서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③ 수출품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

④ 부가가치세의 간접공제방식은 거래액공제방식이라고도 불린다.

정답 4번

①

기본세율은 **10%의 단일세율**이다. 저소득층은 일반적으로 소득 중 소비에 쓰는 비율이 높으므로 **소득 대비 부가가치세 부담이 커지는 역진성**이 나타난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NoteBase

②

면세는 **해당 공급 단계의 매출세액을 면제하지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환급하지 않는다.** 최종소비 단계가 면세이면 이전 생산·유통 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남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2016.1.19, 2018.12.31, 2022.12.31, 2024.12.31>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 · 예방 · 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8.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금융 · 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14. 토지
15. 저술가 · 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NoteBase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9.12.31, 2022.12.31>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③

수출품에 영세율을 적용하면 **수출 매출세액은 0이 되고 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환급**된다. 국내 부가가치세 부담을 제거하므로 수입국의 소비과세와 겹치는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④

간접공제방식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세액공제방식**이다. 거래액공제방식은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하는 직접공제방식**이다.

NoteBase

문 38. 우리나라의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과세한다.

② 세액공제의 도입은 한계세율의 감소를 초래한다.

③ 실현된 소득에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소득공제는 조세의 부담에 있어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유리하다.

정답 2번

①

소득세는 **개인별로 각자의 소득에 과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가족 구성원의 소득을 가구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②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줄인다.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한계세율 자체를 낮추는 제도는 아니다**.

③

소득세는 **실현된 소득에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유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미실현 평가이익은 원칙적으로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④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므로, 누진세율 아래에서는 **같은 금액을 공제받아도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의 절세액이 더 크다**.

NoteBase

문 39. 조세부담의 전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업의 조세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된 경우는 전방전가에 해당한다.

② 근로자의 조세부담이 기업에게 전가된 경우는 후방전가에 해당한다.

③ 조세부담의 전가로 인해 경제적 귀착은 법적 귀착과 다를 수 있다.

④ 조세부담의 전가는 경제주체 간에 경제적 관계의 특성에 의해 발생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는 공급자, 기업은 수요자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은 **공급자에서 수요자로의 전방전가**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전방전가는 재화나 생산요소의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조세부담이 넘어가는 경우이다. 기업이 상품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세금의 일부를 부담시키면 상품의 판매자인 기업에서 구매자인 소비자로 부담이 이동하므로 전방전가이다.

② X: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는 노동을 공급하고 기업은 노동을 구매한다. 근로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임금 상승 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으로 넘어가면 **노동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이동하는 전방전가**이다. 반대로 기업의 부담이 임금 하락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후방전가이다. 근로자와 기업이라는 명칭만 보지 말고 해당 시장의 공급·수요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③ O: 법적 귀착은 법률상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한 것이다. 경제적 귀착은 가격·임금 등의 조정 이후 **최종적으로 실질 부담을 지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뜻한다. 전가가 일어나면 법적 납세자와 최종 부담자가 달라질 수 있다.

④ O: 조세부담은 판매가격이나 생산요소 가격이 조정되는 거래 관계를 통해 이전된다. 그 방향과 크기는 **수요·공급의 상대적 탄력성, 시장구조** 등에 달려 있다. 법에서 특정 주체를 납세자로 정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주체가 전액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NoteBase

문 40. X재에 대한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는 각각 $Q^D = 100 - P$와 $Q^S = -20 + P$이다. X재에 종량세를 부과한 후 조세수입이 800이라면, 단위당 종량세는? (단, P는 가격이고, Q는 수량이다.)

① 10

② 20

③ 30

④ 4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단위당 세금을 t라 하면 구매자 가격과 판매자 가격의 차이가 t이므로 과세 후 거래량은 $Q = 40 - \frac{t}{2}$이다. **세수** $tQ = 800$을 적용하면 $(t - 40)^2 = 0$이 되어 단위당 세금은 40이다.

계산 과정

단위당 종량세를 t, 구매자 지불가격을 P_D, 판매자 수취가격을 P_S라 하자. 과세 후 두 가격의 차이는 $P_D - P_S = t$이다. 수요는 구매자 가격에, 공급은 판매자 가격에 반응하므로 두 가격을 구별해야 한다.

균형거래량을 Q라고 하면 수요함수에서 $P_D = 100 - Q$, 공급함수에서 $P_S = Q + 20$이다. 따라서 가격차 조건은 다음과 같다.
$t = (100 - Q) - (Q + 20) = 80 - 2Q$
$Q = 40 - \frac{t}{2}$

조세수입은 단위당 세금과 **과세 후 거래량**의 곱이다. 세전 거래량 40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에 따라 감소한 Q를 사용한다.
$t\left(40 - \frac{t}{2}\right) = 800$
$80t - t^2 = 1600$
$t^2 - 80t + 1600 = 0$
$(t - 40)^2 = 0$
$t = 40$

t=40이면 Q=20이고, 구매자 가격은 80, 판매자 가격은 40이다. 가격차 40에 거래량 20을 곱하면 조세수입 800이 되어 조건을 만족한다. 따라서 단위당 종량세는 **40**으로 ④와 일치한다.

NoteBase